

# 이낙연 “책임총리, 제청권 애매모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책임총리’의 제청권이 애매해 헌법의 근간이 무너지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해속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지금까지 저희들은 대통령이 지시하면 받아 쓰기는 총리와 장관만 봤다. 책임총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내각에 대한 제청권도 총리가 행사해야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책임총리 개념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감각적으로 내각이 할 일은 총리가 최종적으로 책임자이고 우선적인 결정권자다. 제청권은 애매한 데가 있다. 총리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것은 헌법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이다. 국무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헌법) 무의미해진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장관 제청권이 있지 않다. 정해진 수순으로 제청만 해서 총리가 내각을 총괄할 수 없다”는 전 의원의 추가

“헌법 근간 무너지 수도... 제안·제청 함께 하는 일 가능”  
“제청권 적극 행사하고, 특히 해임건의권 분명히 행사해야”

질의에 대해 “이쪽에 좋겠다 하는 인물이 있으면 제안을 드리는 일, 제청을 함께 하는 일 정도는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자는 “제청권과 인사권은 충돌하지 않으니 제청권을 적극 행사하고, 특히 해임건의권을 분명히 행사해야 한다. 국무위원이 제대로 못하면 대통령에게 말해서 분명히 해야 내각을 통할할 수 있다”는 주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그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책임총리제가 제왕적 대통령의 독단, 전횡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구조라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에게 책임총리를 약속했느냐”고 묻자 “저에게 약속했다기보다는 (문 대통령) 공약 중에 책임총리제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안다”

고 설명했다. 박병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과) 의미 있는 협의를 했다고 했다”며 “정식 총리가 되면 정부조직법에 따라 제청권, 해임건의권이 있다. 책임총리로서 행사할 것인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약한다고 조심스럽게 얘기하던데 의미 있는 협의 수준에 머물 것인가”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의미 있는 협의라는 것을 제청이라고 말하기에는 주체롭다. 일방적 통보라고 보기도 그렇다”면서 “(문 대통령과) 상의를 했고, 제가 제 의견을 모두 관철했다는 것은 아니고 제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도 있다. 다음 단계의 인사도 사전 설명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협치와 통합 차원에서 아권인사도 추천할 의사가 있냐는 물음에 이 후보자는 “그 문제는 큰 틀의 논의가 선행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보다 무관하게 총리가 ‘누가 좋습디다’ 하는 것은 철저히 보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제청권을 행사한다면 자유한국당도 대상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영원한 적폐청산으로 머무느냐”는 질문에는 “그 당에 속했다고 해서 모든 분이 그렇게 분류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또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책임장관 역할은 사실상 수행하지 못하고 청와대 안보실장의 도움을 받거나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 얘기한 것이냐는 책임장관도 무너졌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여야 간에 담이 달라도 협치를 하는 세상인데 청와대와 내각이 협력하고 보완한다는 것이 책임장관의 붕괴라고 봐야 된다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집무실에 상황판을 만들어 매일 매일 점검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이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상황판을 시연한 뒤 “정년 실업이 올해 4월 11.2%로 1999년 외환위기 때와 비슷한 정도로 심각하다”며 “그때와는 달리 지금의 청년실업은 구조적인 이유라서 청년들의 고통이 오래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가 시장의 일자리 실패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文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 설치

공약 이행 18개 지표로 구성... ‘정부가 시장실패 보완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설치된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을 시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집무실에 상황판을 만들어 매일 매일 점검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이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상황판을 시연한 뒤 “정년 실업이 올해 4월 11.2%로 1999년 외환위기 때와 비슷한 정도로 심각하다”며 “그때와는 달리 지금의 청년실업은 구조적인 이유라서 청년들의 고통이 오래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가 시장의 일자리 실패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정책이 최고의 성장전략이며, 양극화 해소 정책이며, 복지정책이란 점을 명심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주시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상황판 스크린을 터치하면서 지난 4월 기준 주요 일자리 동향을 참석자들에게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금년 4월 주요 일자리 동향에서 취업자가 서비스업에서 많이 증가했지만 전체 실업률은 여전히 2000년 이후 최고이고, 청년 실업률은 1999년 이후 최고”라며 “특히 비정규직도 전체 노동자의 3분의 1 수준이고 더더욱 우리가 안타까운 건 임금격차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뿐만 아니고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을 대비하면 거의 3분의 1 수준임을 알 수 있다”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해소가 시급한 사안임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스크린을 다음 장면으로 넘기면서 “고용률이 4월 현재 66.0%인데 이것이 OECD 평균하고 비교해보면 한 2%p 정도 낮아서 크게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청년의 경우 고용률이 OECD 평균보다 거의 10%p 낮아서 청년 실업년이 대단히 심각한 상태를 알 수 있고, 여성의 경우도 OECD 대비 7%p 정도 낮아서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를 늘리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청년·여성 고용 활성화를 촉구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장년 일자리 현황 화면을 손으로 짚으면서 “그럼에도 고용률이 높게 유지하는 건 장년 일자리가 높기 때문인데 이걸 긍정적으로 보자. 일단은 되고 난 이후에도 청년 세대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니 부모 세대가 다시 취업 전선에 나섰기 때문”이라며 “장년이 고용된 일자리는 전부 비정규직과 질 낮은 일자리다. 장년 고용률이 높은 상황 속에서도 여러 경제 어려움이 담겨 있다고 본다”고 일자리의 질적 향상에 방점을 두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하며 내년부터 임기 내 총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제 1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집무실에 상황판을 설치해 직접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공언했으며 실

제 취임 후 첫 번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한 바 있다.

이날 청와대 비서동인 여민관 내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된 일자리 상황판은 ‘일자리 양은 늘리고, 격차는 줄이고, 질을 높인다’는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총 18개 지표로 구성돼 있다.

▲고용률 ▲취업자수 ▲실업률 ▲청년실업 ▲취업유발계수 ▲취업자 증감 ▲창업(신설법인수) ▲고용보험 신규취득 ▲임금격차 ▲임금상승률 ▲저임금근로자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 ▲근로시간 등 일자리지표 14개와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설비투자 증가율 ▲소매판매 증가율 등 노동시장과 밀접한 경제지표 4개다.

상황판은 2개의 화면으로 구성됐다. 일자리 상황을 보여주는 메인 화면에서는 18개 지표별로 현재 상황, 장기적 추이, 국제 비교 등을 나타내고 있으며 각 지표의 분야·지역·연령·성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메인 화면 하단에는 문 대

통령 정부의 4대 일자리 정책(민간·공공 일자리,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청년고용, 창업)의 성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보조 화면은 18개 지표의 최근 2년간 동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5초 간격으로 지표가 바뀌도록 돼 있다.

청와대는 “일자리 상황판은 우선 1단계로 일자리와 관련된 18개 지표들을 직접 입력해서 보여주고 있으나 향후 고용관련 전산망과 연계해 각종 지표들이 실시간 자동 업데이트가 되도록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시연회에 함께 한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일자리 상황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일자리의 양과 질에 관한 새로운 지표들을 계속 발굴하고 상황판의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일자리 상황판이 정착되면 국민들이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대통령 집무실의 상황판을 함께 볼 수 있도록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

## 정부 조직개편 박차...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박광은 “女 대통령, 이미 밝혀”... 소방청·해양경찰청 독립, 외교통상부 복원 등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4일부터 각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핵심 과제인 정부조직개편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조직개편의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정부부처 업무보고 첫날인 이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등에 이어 보고를 진행했다. 행정부는 대통령의 공약을 바탕으로 다양한 조직개편안에 대한 검토 작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 당선 이후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이뤄졌던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후

보 시절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앞 정부의 행정 부처들을 마구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존의 정부조직을 유지하면서 필요하면 기능을 재편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일단 큰 개편은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발표한 것들만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공언했다. 박광은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처의 의견도 물론 존중해야겠지만 최소한 어떻게 조정할지 대통령께서 이미 밝혔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후보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정부조직개편안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과 벤처·창업 지원을 전담하는 중소기업부 ▲국민안전처에서 소방청·해양경찰청 독립 ▲외교통상부 복원(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전) ▲국가정보원을 해외정보정보원으로 전환 등이 있다.

이 중 중소기업부 신설이 가장 먼저 가시화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차관급인 청 단위 조직이지만 장관급 부처들과 함께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이같은 분위기가 읽힌다. 청 단위 조직 중 업무보고를 진행한 곳은 중소기업청이 유일하다. 송기현 민주당 의원은 중

소기업청은 중소기업부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들 세월호 사건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급조했던 국민안전처는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대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이 신설, 양 기관을 ‘청’급 조직으로 승격해 육상·해상의 재난 대응 체계를 일원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업무보고 일정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통일외교부와 위원회에서 과제별 업무보고를 할 때 개별보고를 진행한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와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고 국정원을 대북 및 해외, 안보, 테러, 국제 범죄 전담 기관으로 바꾸겠다고 거듭 공언해왔다. 박 대변인은 “국정원과 검찰도 정부 조직이긴 하지만 별도로 이뤄질 일이기 때문에 (조직개편에 대한) 부처의 의견을 받을 경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뉴스

文, 안보실 1·2차장에 이상철·김기정 교수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산하 1·2차장에 이상철 성신여대 교수와 김기정 연세대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이 차장은 전남 나주 출생으로 육군사관학교(38기)를 졸업, 국방부 군비검증제도단장을 지낸 예비역 준장 출신 인사다. 국방부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와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대표를 지냈으며 정책실에서 북한 정책을 담당하기도 했다.

김 차장은 경남 통영 출신으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와 미국 코네티컷 대학에서 정치학 석·박사를 마친 학자 출신이다. 현재 연세대 행정대학원을 지내고 있다.

국가안전보장이사회(NSC) 사무차장을 겸임하는 안보실 1차장은 안보전략·국방개혁·평화군비통제 업무를 담당한다.

2차장은 외교통일 정책·사이버 안보 등을 책임지며 박근혜정부에서의 외교안보수석 역할을 겸한다. /뉴스

## 감사원 “4대강 감사 검토 중”... ‘정치감사’ 부담

감사원이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정책감사와 관련해 본격적인 감사 검토에 들어갔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전남 김수현 사회수석을 통해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감사 범위와 접근방법 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도 감사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언론에서는 감사원이 망설이는 것처럼 쓰거나 심지어 연내 착수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내부적 절차가 필요하고 기초적인 사실 관계를 검토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긴 하지만 헌법상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시를 받지 않으며 관련 절차에 따른 요청이 들어와야 한다. 감사원법 등에 따르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할 수 있는 방법은 ▲직권에 의한 감사 ▲공익감사청구 ▲국무총리의 감사 요구 등 세 가지다.

직권 감사의 경우 감사원이 자체 판단으로 감사에 착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4대강 감사와 관련한 야당의 반발이 거센 현 상황에서는 부담이 큰 게 사실이다. 따라서 공익감사청구를 받아들여거나 이낙연 후보자가 정식 총리가 된 뒤 감사를 요구하면 착수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마침 이날 녹색연합 등 40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감사원에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환경부나 국토부에서도 감사 청구를 할 것 같다”며 “차체적으로 (감사 착수에 대한) 검토는 이미 시작했지만 공익감사청구들이 접수가 되면 각 기관마다 청구한 내용들도 포함해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문 대통령이 지난 22일 4대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한 이후 감사 착수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자 민원인들의 전화가 빗발치는 등 적잖은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감사 검토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밝힘에 따라 여론의 압박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감사 결과와 관련해 ‘정치감사’ 논란이 불 보듯 뻔한 데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남아있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이명박 정부에서 두 차례, 박근혜 정부에서 한 차례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감사 결과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1차)’→‘총체적 부실(2차)’→‘한반도 대운하의 사전단계(3차)’ 등으로 그때마다 달라지면서 감사원의 신뢰성과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웠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또다른 감사결과를 내놓는다면 감사원이 스스로 과거의 4대강 감사 결과를 부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권으로부터 거센 비난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4대강 감사가 오는 12월이면 임기가 끝나는 황천현 감사원장의 거취 문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부총리급인 감사원장은 헌법상 4년의 임기가 보장되며 한 차례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황 원장은 지난 2013년 12월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인사다. 따라서 이미 세 차례나 4대강 감사를 실시한 감사원에, 그것도 정치감사 논란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감사를 지시한 것은 황 원장의 자진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뉴스

## 기재부, 6월에 공공부문 일자리 총원 로드맵 발표

기재부가 다음달 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총원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24일 오전 진행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주요 업무현안과 중장기 과제 및 기획재정부 소관 공약들에 대한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이 국정기획위의 설명이다. 또 일자리 추경을 차질 없이 편성하기 위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기재부는 이날 국정기획위에 공공부문 일자리 총원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늦어도 6월 말까지는 로드맵을 발표할 방침이다. 재정 소요액은 약 4조2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공공부문 총원과 함께 공공부문 개혁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효율적 국정과제 수립을 위해 재정계획수립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재정TF의 소관 분과는 기획분과로 기획분과와 경제 1·2분과 위원 중에서 구성할 예정이다. 윤호중 기획분과위원장이 TF단장을 맡기로 하고 실무인력은 기획분과와 경제 1·2분과 소속 전문위원으로 구성된다.

국정기획위와 기재부는 또 6월 임시국회에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뉴스